

李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지난 20대 대선,尹과 0.73%p 차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중도층 공약 지역화해 언급했지만 고집하진 않아 文, 같은 날 ‘포용·통합’ 강조 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 하자”며 중도층 구애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상반기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이 나오자, 중도층을 포섭해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진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를 극복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표율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해 보수의 구심점이 됐고, 민주 진영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으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 계파 갈등, 문재인 정권과 이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등이 낙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대표의 공식선거법 1심 재판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등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를 논의하고, 여전히 야당의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기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기대 섞인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정권을 보수 진영에 넘겨줄 때인 정치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영이 결집한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는 범야권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시인들이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쟁을 일삼아 불신의 온상이 된 국회

를 바라보는 중도층 민심에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이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는 이 대표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 대표는 또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해 지원’ 사업을 언급했지만, 그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당의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내의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인터뷰가 이 대표의 대표연설 날 나온 것도 이 대표의 지지층 ‘파이 키우기’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는 당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내놓고 있다. 이 대표가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간접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원하는 듯 하다.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까지 포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대권가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상마를 사자를 찾은 이 대표에게 비이재명계를 포용하고 통합해 당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기필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대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된 이후에 확장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단합이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겼던 2017년 대선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나와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이 세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라며 “그리고 확장된 가운데 단합함으로써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 그 당시에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이 지금 없다”며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51%가 되나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추경호 등尹 면회... ‘옥중정치’ 일조

尹 ‘비상계엄 정당 주장’ 적극 동조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줄지어 찾고 있다. 이들은 ‘개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등 ‘옥중 정치’에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은 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을 찾은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어 7일에 이상현·김민진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

중 30여 명이 면회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만나고, 면회 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하도록 돕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 이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김기현 전 대표 등 인사들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적극 동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조력하는 모양새에도 면회가 줄을 잇는 것은 대선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와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옥중 정치’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이날 면회를 마지막으로 정치인 면회는 중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당정, 방산 中企에 2년간 최대 50억 지원

당정협의회 후 GVC 사업 소개 “野, 방산강국 위해 악법 폐기해야”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兆 투입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활용 요청

당정이 10일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기대되는 ‘K-방산’ 지원 강화를 위해 방산분야 소재·부품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최대 2년 동안 기업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는 GVC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진입을 위해 수출용 제품(소재부품) 개발, 장비도입, 컨설팅 등 중소기업별로 종합 지원하는 GVC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

템, LIG넥스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풍산 등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불과 석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방산수출 마저 정치적 잣대로 선별하려고 했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는 법안도 민주당이 6개월 넘게 붙잡는 바람에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돌변했다. 지난 6일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안보 산업을 인공지능, 문화와 함께 신성장 동력 3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의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권한 한시적 위임 방안 ▲군인 및 국가 연구소 과학자 퇴직시 취업 제한 완화 방안 마련 ▲방산수출을 위한 적극적 세일즈 외교 ▲공

석인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우주,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해 미래 국방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첨단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방산기업들이 납기일을 중요시하는 업계 특성상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흔쾌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방산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패키지 강화 등에 대한 기업 측의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사우디 아라비아,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 ▲관한대행 차원의 서하문 발송 ▲방사청·국방부 차원의 현지 방문 ▲국회에서 수출외교를 담당하는 현지 방문단 구성 등 협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崔 대행,美 관세부와 대응방향 논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제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언급과 관련해 상황 파악 및 대응 방향 논의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언급 관련, 상황

파악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발표를 예고한 상호관세는 11일 발표 예정이다. 중국 등을 상대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일 정상회담 동향, 디지털분야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방향 등도 논의했다. /서예진 기자